

이진숙, 논문표절 논란 확산… 자녀 조기유학 위법은 ‘인정’

〈부총리·교육부 장관 후보자〉

제자 논문과 내용 유사·오탈자 일치
범학계 국민검증단, 14일 결과 발표
자녀 유학 때 ‘국외유학규정’ 위반
이 후보자 “당시 법령 인지 못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충남대 전 총장)를 둘러싼 논란이 논문 연구윤리 위반 의혹에서 자녀의 불법 조기유학 문제까지 확산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오는 16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질 검증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과 교육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2009년 3월 대한건축학회 논문집에 발표한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사례조사를 통한 조명디자인 감성평가’는 한 달 앞서 발표된 제자 김모 씨의 석사 학위논문과 내용이 상당 부분 유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의 해당 논문은 제자 논문의 사진, 표, 문장 등을 거의 동일하게 복제한 수준으로, 김 의원은 지난 9일 “정상 반, 표절 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사용하고 않았으면”이라

는 비문까지 그대로 실렸다”며 오탈자까지 일치하는 정황을 지적했다.

이에 주진우 의원은 충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했다. 과거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을 주도했던 14개

전국 교수·학술단체 연합체인 ‘범학계 국민검증단’도 오는 14일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 요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가 자녀를 해외에 유학 보낼 당시 ‘국외유학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둘째 딸은 2007년 중학교 3학년을 중퇴한 뒤 미국 고등학교 9학년에 조기 유학을 떠났으며, 이는 당시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을 위반한 사례로 해석되고 있다.

해당 규정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해외에 거주하지 않으면 조기 유학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 후보자 부부는 당시 충남대와 청주대에서 각각 교수로 재직하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당시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

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밝혔다.

교육계와 정치권 내부에서도 후보자 자질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만큼은 아니다”라는 인식 속에 “경계에 있는 사안인 만큼 청문회에서 해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문 표절에 자녀 조기유학 문제까지 겹쳤다”며 책임 추궁에 나서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제자 논문을 베낀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타까지 그대로 베낀 건 정말 창피한 일”이라며 “이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면 대학 총장과 교수들 앞에서 어떤 권위를 세울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무전공학과, 경쟁률 ‘높고’ 입시결과는 ‘중간’

경쟁률, 평균 상위 25.92% 해당
입시결과, 상위 누적 평균 44.84%
자연계 수험생 지원 비중 높아

전공자유선택제(무전공)가 확대되는 가운데, 2025학년도 수시에서 전 모집단위 선택이 가능한 유형1 무전공학과 의 경쟁률은 일반학과보다 높았다. 또 입시결과는 대학 평균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진학사는 10일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수도권 주요 15개 대학의 수시 교과·종합전형 무전공학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무전공학과는 통상 일반 학과보다 선발 인원이 많아 경쟁률이 낮은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실제로는 지원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진학사 분석에 따르면, 15개 대학 무전공학과 의 경쟁률 순위는 해당 대학 전체 모집단위 중 평균 상위 25.92%에

해당했다.

반면, 입시결과는 경쟁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대학별 평균에 가까운 중간권 수준을 보였다. 15개 대학의 무전공학과 입결 순위는 전체 모집단위 기준 상위 누적 평균 44.84%로 집계됐다.

무전공학과 의 운영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교과), 인하대 등은 계열 구분 없이 통합 선발을 실시했고, 국민대, 동국대, 명지대, 서울시립대, 숭실대, 아주대, 한양대(종합) 등은 인문·자연 계열로 나눠 선발했다.

경쟁률을 기준으로 보면, 통합 선발 무전공학과는 대학 내 평균 상위 21.76%로 나타나 계열 구분 선발보다 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무전공(자연)의 경우 계열 내 평균 상위 22.93%로, 무전공(인문)의 35.40%보다 높았고, 통합 선발에서도 자연계 수험생 지원 비중이 높은 경향

을 보였다.

이는 무전공 입학생이 향후 첨단학과나 인공지능 전공 진입을 노리고 지원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경쟁률과 달리 입시결과는 계열별 차이를 보였다. 무전공(통합)의 입결 순위는 평균 상위 40.52%, 무전공(인문)은 40.92%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나, 무전공(자연)은 평균 55.47%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연계열 내에서 공대, 컴퓨터 관련 학과의 입결 상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무전공(자연)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은 “무전공학과는 아직 도입 초기라 누적 분석이 어려운 만큼, 전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략을 세우는 수밖에 없다”라며 “올해는 전형 방법과 선발 인원을 점검하고, 향후 희망 전공 진입 가능성까지 따져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이달 재산세 2.3조 부과… 8.6% ↑

〈전년 대비〉

재산세 고지서 493만건 발송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 3624억원을 확정하고 10일 재산세 고지서 493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861억원(8.6%) 증가한 2조3624억 원이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 6989억원, 건축물 6529억원이며,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06억원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4119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566억원, 송파구 237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7만건으로, 지난해 381만건 대비 1.5%(6만건) 증가한 반면,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6억원 초과 주택은 130만건으로 지난해 118만건 대비 10.1%(12만 건) 증가했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해 세 부담이 완화됐다. 또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지난해와 같이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시장군수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정분담 완화 요청”

경기도에 공동건의문 전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는 지난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에 시·군 재정분담 완화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건의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국민 25만 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의 지원금을 1인당 1~2차에 걸쳐 제공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발표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 참석자 단체사진. /남양주시

사업 총예산은 13조 9000억 원으로, 이 중 1조 7000억 원은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구조다. 경기도와 시·군 간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협의회는 이번 공동건의문을 통해 경기도가 시·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분 전체를 도에서 우선 부담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불가피

하게 전액 부담이 어려울 경우에도 최소한 50% 이상을 경기도가 분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소비쿠폰의 지급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시·군의 행정적 업무 부담도 고려해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건의했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역대급 폭염에 냉방기기 전기 화재 주의보

7~8월 ‘전기적 요인’ 화재 최다 발생

올여름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가 예고된 가운데 에어컨·선풍기 등 사용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는 7~8월 냉방기기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권혁민)가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7~8월에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7월 924건, 8월 919건이 발생, 전체 총 7036건 중 26.2%(1843건)가 이 기간에 집중됐다.

시는 지난 5년간 전체 화재 건수 총 2만 7760건 중 7~8월 일어난 화재는 16.2%(4479건) 수준으로 겨울철에 비해선 적지만 ‘전기적 요인’에서 비롯된 화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냉방

기기 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냉방기기 화재 중 ‘전기적 요인’은 총 191건으로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 72건(37.7%) ▲미확인 단락 41건(21.5%) ▲전선 등의 절연 성능 저하 40건(20.9%) 등 순으로 많았다.

또 시는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총 1만 586건 중에서 7월이 1002건(9.5%)으로 가장 많았고, 8월(927건, 8.8%)도 겨울철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 만큼 각 가정에서 사용 중인 콘센트·전선 등을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지역에서 일어난 가정 화재의 원인이 냉방기와 연결된 낡은 멀티탭에 의한 화재로 추정되는 만큼 냉방기기 멀티탭 점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자제 등 여름철 냉방기기 및 전기 사용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